

생태적 다중시민성 개념

심 광 택

진주교육대학교

I. 서론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4).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도 사회과가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 교과라는 점과 시민적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과는 현상이고, 그 실체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며, 학습자에게 사회 인식력과 사회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과이다.

시민적 자질은 법, 선거, 시사, 정치 이론에 대한 지식, 원전 해석, 발표 및 토론 능력, 관용, 집단적 의사결정, 공적 참여 태도를 통해 길러질 수 있지만, 이러한 속성은 시민성 개념의 다의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McCowan and Gomez, 2012: 18). 시민성(citizenship)의 구성 요소는 민주정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시민권, 정치·경제·사회적 과정 참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국민성은 문화, 역사, 언어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정체성을 통해 연대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연유로 국민성은 시민성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민성은 정치공동체 생활에서 시민들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한다. 시민권(civil rights)은 자유권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Bellamy, 2008: 70-82). 그러나 한국 사회과에서는 시민적 자질로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만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초등 사회과의 현실은 수업 모형을 적용한 개념탐구, 문제해결, 의사결정 기능 함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사회에서 서부 개척사를 뒤집어보면 아메리칸 인디언 멸망사와 일치한다. 1916년 이민자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사회과는 사회적 문제 또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사회과에서는 의사결정을 자료 선정 및 처리, 정책 결정 수준에서 각각 강조하는데, 의사결정의 핵심은 미국 사회문제의 기본인 가치문제 접근에 있다(Engle, 1960: 301-306; 2003: 7-10). 즉,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사회과가 도입된 이래, 남한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지구-지방화에 의해 일대 변혁을 겪어왔지만,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적 자질은 여전히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에 머물고 있다.¹⁾ 미국 사회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분단국가의 현실과 과제를 바르게

1) 사회과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인식 교과이며, 과학적인 사회인식이 결여된 시민성 육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e)에 직접 관련하고자 한다면 사회과의 멸망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역사·지리·일반사회의 내용을 시민적 문해력(civic literacy)로 재구성하려면, 일반사회를 의사결정 학습내용으로 전환하고, 역사와 지리를 '지구

인식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학습자에게 미국 사회과의 논리를 답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사회과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년-1997년)에 ‘국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초등 사회과에서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시민적 자질 등 학습자의 기능 및 가치·태도 함양에 집중하고 있다. 초등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정체성 인식 및 장소감수성 회복은 학습 목표로서 위치하기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제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실용주의자, 진보주의자에게 역사는 공공 쟁점 및 문제의 출처로서 분석되고,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다 (Longstreet, 2003: 13). 초등 사회과 교실수업의 실제에서 초등학생은 다양한 규모와 차원에서의 장소감수성을 회복하고²⁾ 정체성을 인식하기보다는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안내받고 있다. 사회 판단력(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능)은 동북아 영토 분쟁과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국토 인식 및 통일 인식 등 사회적 인식력과 행동적 성격이 다른 학습 영역이다. 즉, 지리 학습과 역사 학습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영역은 장소 인식과 역사 인식을 아우르는 사회 인식론 문제이다. 사회 판단력의 요소로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은 학습자의 사회 인식력 즉, 장소 감수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 사회과에서 시민성을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으로 치환하면서, 국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장소 감수성 회복과 국가 정체성 인식 문제는 교실 수업에서 수업 제재 또는 읽기자료 수준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사회 및 민족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에게 다양한 규모에서의 장소감수성 회복과 정체성 인식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 때문에 전환기 사회과교육에서는 시민성과 국민성에 관한 인식(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다문화주의와 성찰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시민과 국민적 자질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는 국가 중심의 포용적인 국민 정체성이 발전한 반면, 한국에서는 민족 중심의 배타적인 국민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이 강한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인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한다. 이는 한국의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배타적인 정책이 국내 화교의 국민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뜻한다. 즉, 국민 정체성은 시민적 권리에 기반하여 형성된다(Choi, 2003: 180-183). 시민권 부여와 관련하여 독일 모델은 민족에 근거하여 이민자가 배제되거나 동부 유럽에서 이주한 독일계 주민에게 바로 시민권을 주는 반면, 프랑스 모델은 자국 영토에 장기간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교육 제도를 통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도록 한다(Brubaker, 1992; Miller, 2000: 88; Eley and Palmowski, 2008: 6). 자유주의자 롤즈(Rawls)의 정의에 관한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여기'를 이해하기 위한 소재로서 인식하며, 자리를 U자형으로 배치한 토론중심 수업을 지향한다(原田智仁, 2012: 169). 일본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는 2005년-2007년까지 실험적으로 초등 3학년년부터 사회과 대신에 시민과를 두고, 시민적 자질을 적절한 사회 가치판단력과 의사결정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남경희, 2012: 19).

2)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비밀장소 만들기 활동을 통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회복 경험, 자연과 관계 맺는 심미적 경험, 자기다움을 발현하는 총족적 경험을 겪을 수 있다(신재철, 2013: 57-109).

차등 원칙³⁾의 영향을 받아 네트워크 시대의 신자유주의화, 다문화 사회화, 지구-지방화에 의해 촉발된 다문화주의와 성찰적 민족주의에 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가가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자국중심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 동화주의이고, 개인에게 형성된 모두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문화주의이다. 동화주의는 성찰적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자질을, 다문화주의는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하여 (세계)시민적 자질을 추출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1. 다문화주의에서의 시민적 자질

서구 민주주의에는 경제적 위계와 신분적 위계가 존재한다. 경제적 위계구조에 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투쟁은 ‘재분배의 정치’를, 신분적 위계구조에서 차별에 대한 투쟁은 ‘인정의 정치’를 낳게 한다(Kymlicka, 2002; 장동진의 공역, 2006: 461-462).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다문화 공존⁴⁾은 경제적 위계에서 출발한 재분배의 문제, 신분 위계 구조에서 출발한 인정의 문제, 문화 차이의 조정 문제 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김창근, 2009: 27).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시대의 다문화 정치에 요청되는 시민적 자질을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재분배의 문제이다. 자본은 결코 위기의 경향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을 이전시킬 뿐이다. 자본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한 종류의 문제에서 다른 종류의 문제로 위기를 이전시킨다(Harvey, 2010; 이강국 옮김, 2012: 370). 마르크스(Marx)에 의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일수를 확대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거나, 노동 가치의 감소나 노동평균생산성보다 우월한 생산기술을 채택하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한다. 자본가들의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기 위한 사회적 생산 수단 및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자본주의적 사회와 환경 부정의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최병두, 2010: 260-262). 결국, 자본 축적의 지속적 성장은 인간 활동이 불가피하게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짐을 의미한다(Harvey, 2010; 이강국 옮김, 2012: 113).

본질적으로 모든 자본의 순환은 투기적이어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는 투기 자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구촌 빈곤 계층의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억압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존권 보장이다.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회 질서의 기초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의 빈곤층과 북한 동포 그리고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 난민에게 학습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명하다. 그것은 네트워크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나와 우리의 경제 행위가 너와 그들의 일상생활 및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너와 그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다. 자본에 대해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을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선택의 경계 속에 가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정의 실천은 다문화 사회에서도 가장 절실한 시민적 자질의 요소로

3) 정의에 관한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제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의에 관한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첫째,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Rawls, 1999; 황경식 옮김, 2003: 400).

4) 김창근(2009)은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시민성의 구성 요소로 다원적 문화의식,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식, 열린 민족의식, 세계 시민의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인정의 문제이다. 헤겔(Hegel)은 상호 인정의 형태로서 사랑과 우정에 의한 원초적 관계, 개인적 권리 측면에서의 권리 관계, 연대에 따른 가치 공동체를 들고 있다. 이를테면, 욕구나 정서는 어떤 점에서 그것들이 충족되거나 거부되는 것을 통해서만 확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은 정서적 일치와 격려라는 성격을 갖는다. 권리 인격체들은 동일한 법에 종속됨으로써 서로를 개인적 자율성 속에서 도덕규범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인간 주체들은 중단 없는 자기 관계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정서적 사랑과 권리 인정에 대한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부여를 필요로 한다. 이는 각각의 주체가 자신의 속성과 능력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이다 (Honneth, 1992; 문성훈·이현재 옮김, 2011: 183-249, <표 1> 참고).

<표 1> 사회적 인정 관계의 구조

인정 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 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 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진행 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 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 부정, 제외시킴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 구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출처: Honneth, 1992; 문성훈·이현재 옮김, 2011: 249

남한 사회에서 빈곤층,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전문직종사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주류 사회의 언저리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권 존중은 사회적으로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약자를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인지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국가와 세계 속에서 어린이, 여성, 장애인, 빈곤층, 이주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른, 남성, 비장애인, 중산층, 원주민이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이 지닌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관계를 인정하는 능력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적 자질의 요소로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문화 차이의 조정 문제이다. 자유주의적 문화주의자는 우리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된 이익을 갖게 되고, 이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 부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자 권리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양립하기 위해서 첫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둘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간 평등 관계(비지배)를 증진시켜야 한다(Kymlicka, 2002; 장동진의 공역, 2006: 471-475). 이 때,

비지배(non-domination)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고 살아가는 조건을 말한다. 운이 좋거나 영리한 노예의 경우처럼 실제로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주인에게 지배되거나, 법과 정부의 적절한 형태에 종속된 경우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기구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Pettit, 1997; 객준혁 옮김, 2012: 175). 비지배자유 원칙이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자유’로서, 페티(Pettit)은 지배가 없는 간섭이 가져오는 불편이 간섭이 없는 지배가 가져다주는 해악보다 더 나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객준혁, 2010: 37). 비지배자유 개념에서 볼 때, 지구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이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지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지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조계원, 2012: 297-298). 비지배자유 원칙에서 시민성은 차이의 인지와 동시에 사회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비지배자유는 인지와 재분배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시민성 보장이 어떤 집단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확한 한계를 제공할 수 있다(객준혁, 2004: 60).

오늘날 비정부조직,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집단의 차이를 축소하고 인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개별 국가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소수자의 집단적 권리를 조건 없이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들이 국제적 자본주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국가라는 영토적 조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집단을 차별하는 개념이지만,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수자 집단의 시민적 자질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비지배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사회·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소수자 집단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보장 즉, 비지배자유 보장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적 자질의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사회와 교육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정의의 실천, 사회적 상호관계 인정, 비지배자유 보장을 시민적 자질의 요소로서 설정할 때, 시민적 자질은 소속감을 토대로 국민적 자질을 포함하면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두 입장의 이분법적 한계를 넘어선다. 이와 같은 시민성 함양을 추구하는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학습자는 개인과 가정, 가정과 이웃, 지방과 국가, 국가와 세계 속에서 개인적 일상(경험)과 집단적 의도(소외 또는 배려에 대한 기억), 집단적 행위(경험)와 국가적 의도(통치체계) 간 관계를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자신의 사회 인식력과 사회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성찰적 민족주의에서의 국민적 자질

국민은 시민적 저항과 권리의 근거로서 민주화와 자율화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개념어로 기능하고 있다. 인민은 인간 평등의 원초적 정서가 포함되어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성에 대한 승인이 내포되어 있다. 시민은 그 자체가 자율적 주체, 정치적 참여, 다양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국민이나 인민 개념이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내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동반한다(박명규, 2009: 263-264).

사회과 교육에서는 제5차교육과정 시기(1987년-1992년)까지 널리 쓰이던 ‘국민’을 제6차교육과정 시기

(1992년-1997년)부터 ‘시민’으로 수정하고, 시민적 자질로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7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서 5학년 역사 영역이 독립한 이후, 2013년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이 예비교사에게 필수 시험과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도 국민성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삶의 터전인 국토 이해에 기반한 장소감수성 회복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민성 교육은 국민이 한국·중국·일본 간 서로 다른 역사 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토와 전통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남한 사회에서 꺼려하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제외하면,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는 시민적 자질이 국민적 자질을 내포할 수 있고⁵⁾, 앞으로 논의할 성찰적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국민적 자질이 시민적 자질과 겹칠 수도 구분될 수도 있다.⁶⁾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각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 의식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Anderson, 1991; 윤흥숙 역, 2002: 27). 민족은 실제, 본질,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권에서 구성원에 의해 상상되고 의지되며 느껴지는 공동체이다(Smith, 2008: 24; 장문석, 2011: 26).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20세기 민족이란 개념이 확산된 계기는 1919년 3.1운동과 1920년대 문화운동이었다. 단일 민족설도 사실은 해방 이후 분단의 위기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분단 상황 속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박찬승, 2010: 10-11). 하지만, 20세기 한국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역사를 이끌고 온 동력과 같은 존재였다.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었기에 독립운동도 가능했고, 국가 건설과 경제 부흥도 가능했고, 통일을 위한 노력도 가능했다(박찬승, 2010: 255-256).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생각에서 민족주의에 동기를 불어넣는 정서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즉, 소속감과 집에 대한 인식이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집안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특수성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Margalit, 2001; 서유경 옮김, 2006: 184-185; 나종석, 2009: 181). 특히, 문화적 소속감은 우리에게 개인적 가치와 계획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때 의지할 수 있고 이해할만한 선택의 맥락과 안전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해준다. 사실상

5) 민족주의와 그 성격이 다른 애국주의의 모습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8년에서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냈던 슈뢰더의 외교 정책과 이에 대한 독일인들의 지지이다. 슈뢰더의 외교 정책은 기존 총리들의 현실 정치와 본질적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존의 총리들이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독일이 인정받도록 했다면, 슈뢰더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관철하려는 것을 국제법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시도했다. 슈뢰더는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에서 구축해 온 독일의 실재적 위상을 기초로 프랑스·러시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의 일방적 힘에 대항하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독일의 신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다(Schöllgen, 2005: 5; Hacke, 2005: 10-12; 장준호, 2012: 191 재인용). 세계 평화를 위한 독일 민족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시민은 슈뢰더를 지지하면서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독일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독일에 애국심을 가지게 되었다(Kronenberg, 2009: 43; 장준호, 2012: 191 재인용).

6)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남북 분단과 광범위한 재외한인의 존재 때문에 세계적 관점을 지닌 애국주의는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주의만으로는 북한과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선민, 2008: 114). 최근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구호는 사실상 민족국가의 주권과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 혹은 국민을 보호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경쟁력 담론의 궁극적인 목표다. EU와 IMF는 그리스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금융자산가의 이자수입을 보장하는 경제 구제책을 강요했다(Ardinat, 2012; 정기현 역: 9).

민족 정체성이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정체성을 위해 안전한 토대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유된 가치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Kymlicka, 2010; 장동진의 공역, 2010: 216).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실존하기 위한 존재 기반은 영역과 정체성이다. 개인과 가정, 가정과 사회, 사회와 국가, 국가와 세계 속에서 장소에 대한 감수성 회복과 영역에 대한 소속감 인식은 개인적 일상(경험)과 집단적 의도(소외 또는 배려에 대한 기억) 간의 관계를 통해 약화되기도 강화되기도 한다.⁷⁾ 문화적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이주한 사회(국가)에서 이중어 정책과 단일어 정책 가운데 어느 정책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이주자와 그들의 2세대는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거나 소속감을 갖는 정도가 달라진다.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자국민끼리 모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국어에 내재한 지리와 역사 즉, 국가에 대한 장소감, 소속감,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밀러(Miller)에 따르면 영국에서 예전에는 인종과 종교가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였지만, 지금의 영국인들은 언어나 역사 그리고 개인적 자유나 관용 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 전통을 통해 영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느끼고 있다(곽준혁, 2010: 114). 즉, 언어와 종교, 영토와 민족, 문화적 전통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국가 및 지구-지방적 규모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는 유럽과 아메리카 문명의 교차로에 해당하는 카리브해 동쪽에 위치한다. 면적 9,104km², 인구 약 400만 명의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이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치령으로 편입한 섬이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투표권 없는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 공용어가 스페인어와 영어이지만 대부분 스페인계 혼혈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그림 1 참고). 미국의 지배가 114년이나 흘렀지만 중심 도시 산후안(San Juan)에서도 스페인어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그림 2 참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섬에 대한 애착과 스페인어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외부로부터 격리된 섬사람들끼리 공유된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서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와 평등 실현에 동력원이 되었을 것이다.⁸⁾



그림 1. 수영장 안내(Parguera: 2009.9)



그림 2. 국기 게양(Old San Juan: 2009.9)

7) 예를 들면, 카시타(Casitas)란 푸에르토리코인 공동체가 ‘고향에 있는 집’과 비슷한 건물을 지으면서 생긴 작은 주택을 가리킨다. 뉴욕 맨해튼에서 푸에르토리코인 공동체 정원은 카시타 자리에서 생겨났는데, 푸에르토리코의 깃발과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고, 노인들은 야구를 구경하며 햇살 아래 앉아 있다. 주민들의 모임은 이 8×10 피트 크기의 건물 주변에서 이루어진다(Cresswell, 2004; 심승희 옮김, 2012: 7).

8)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자유와 평등에 최고한도로 합치되는데, 왜냐하면 종교에 기초한 민족주의 운동과 달리 어떤 공유된 가치관도 상정하지 않으며, 인종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달리 본질적으로 배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Kymlicka, 2010; 장동진의 공역, 2010: 207).

그러나, 2012년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국가 지위 변경에 관한 주민 투표 결과 54%가 찬성하였고, 변경 방법으로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 61%, 자유연합 체제 33%, 독립 국가 5% 순이었다. 푸에르토리코인의 섬에 대한 소속감과 국가 정체성이 미국의 언어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권력 앞에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대목이다. 민족주의자, 급진주의자, 스페인 또는 영국과의 유대세력 등으로 구성된 46% 반대의 목소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가라앉고, 푸에르토리코의 미래는 미국 의회의 실리적 계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안녕은 자아 정체성과 소속감을 전제로 하듯이, 이웃과 사회, 사회와 국가의 미래 또한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은 모국어를 통한 상호 관계에서도, 두고 온 산하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도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성찰적 민족(국가)주의는 문화·역사·지리에서 민족(국가)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아내고자 한다. 민족의 삶터 한반도에서의 남북 분단 현실과 밖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 약 700만 명을 염두에 둔다면, 민족 정체성 인식과 국토에 대한 장소감수성 회복을 국민적 자질의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학습자가 성찰적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국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과정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민족 정체성과 국토애를 길러가는 학습자는 국가의 권력 남용과 자본주의 모순에 저항하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네트워크 시대 남한의 다문화 정치에 요청되는 시민적 자질을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학습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실천, 사회적 상호관계 인정, 비지배자유 보장을 배우면서 시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는 시민적 자질이 국민적 자질을 내포할 수 있고, 성찰적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국민적 자질이 시민적 자질과 겹칠 수도 구분될 수도 있다. 성찰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학습자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 밖에서 거주하는 한민족 약 700만 명을 염두에 두고, 민족 정체성과 국토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국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민성 기르기' 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문화주의와 성찰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시민과 국민 되기'를 사회과 교육목표로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과 국민적 자질은 생태적 다중시민성 개념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실천, 사회적 상호관계 인정, 비지배(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자유 보장, 정체성 인식과 장소감수성 회복 등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시민과 국민적 자질의 요소

교육과정 시기	시민성 개념	시민과 국민적 자질의 요소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	민주시민성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2007-현재)	다중시민성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다중 정체성과 장소감수성 인식
전환기 교육과정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실천, 사회적 상호관계 인정, 비지배자유 보장, 정체성 인식과 장소감수성 회복

참고문헌

- 곽준혁(2004).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 시대 비지배 자유 원칙. **사회과학연구**, 12(2), 34-66.
- 곽준혁(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 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파주: 한길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
- 김창근(2009).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73, 21-50
- 나종석(2009).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6, 169-197.
- 남경희(2012).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추진 동향. **사회과교육**, 51(2), 15-26.
- 박명규(2009).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 주체**. 서울: 소화.
- 박찬승(2010).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 신재철(2013). **행복지리적 관점에서의 초등사회과 지리교육- 아동의 비밀장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광택(2012). 지속가능한 사회과 목표설정: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과 교육**, 51(1), 91-107.
- 심광택(2013). 한국·중국·일본 초등 사회과의 전환점: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과 교육**, 52(1), 31-51.
- 이선민(2008).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장문석(2011).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 장준호(2012). 헤겔의 인륜적 애국심. 곽준혁·조홍식 엮음.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 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파주: 한길사. 171-195.
- 조계원(2012).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심. 곽준혁·조홍식 엮음.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 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파주: 한길사. 267-300.
- 최병두(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 정의**. 파주: 한울.
- 原田智仁(2012). 일본 시민성교육의 계보와 사회과의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9(4), 159-170.
- Anderson, B.(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파주: 나남.
- Ardinat, G.(2012). La compétitivité, un mythe en vogue. *Le Monde diplomatique*, 703. 정기현 역.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신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제49호
- Bellamy, R.(2008). *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ubaker, R.(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e, H.(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Doctoral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n Irvine.
- Cresswell, T.(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심승희 옮김(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
- Eley, G. and Palmowski, J.(eds.)(2008).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Stan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Engle, S. H.(2003). Decision Making: The Heart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Social Studies*. 94(1). 7-10.
- Harvey, D.(2010). *The Enigma of Capital and the Crises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강국 옮김(2012).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들**. 파주: 창비.
- Honneth, A.(1992).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문성훈·이현재 옮김 (2011).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사월의책.
- Kymlicka, W.(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장휘·우정열·백성욱 공역(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동명사.
- Kymlicka, W.(2010). *Multicultural Citize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공역(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파주: 동명사.
- Lilla, M. Dworkin, R. and Silvers, R. (eds.)(2001). *The Legacy of Isaiah Berlin*. New York: NYREW Inc. 서유경 옮김(2006).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 서울: 동아시아.
- Longstreet, W.S.(2003). Early Postmodernism in Social Education- Revisiting "Decision Making: The Heart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Social Studies*. 94(1). pp. 11-14.
- McCowan, T. and Gomez, S.(2012). *Citizenship Education in Commonwealth Countries*.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 Miller, D.(2000).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 Pettit, P.(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곽준혁 옮김(2012).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파주: 나남.
- Rawls, J.(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옮김(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Smith, A. D.(2008). *The Cultural Foundations of Nation: Hierarchy, Covenant, and Republic*. Malden, MA: Blackwell.